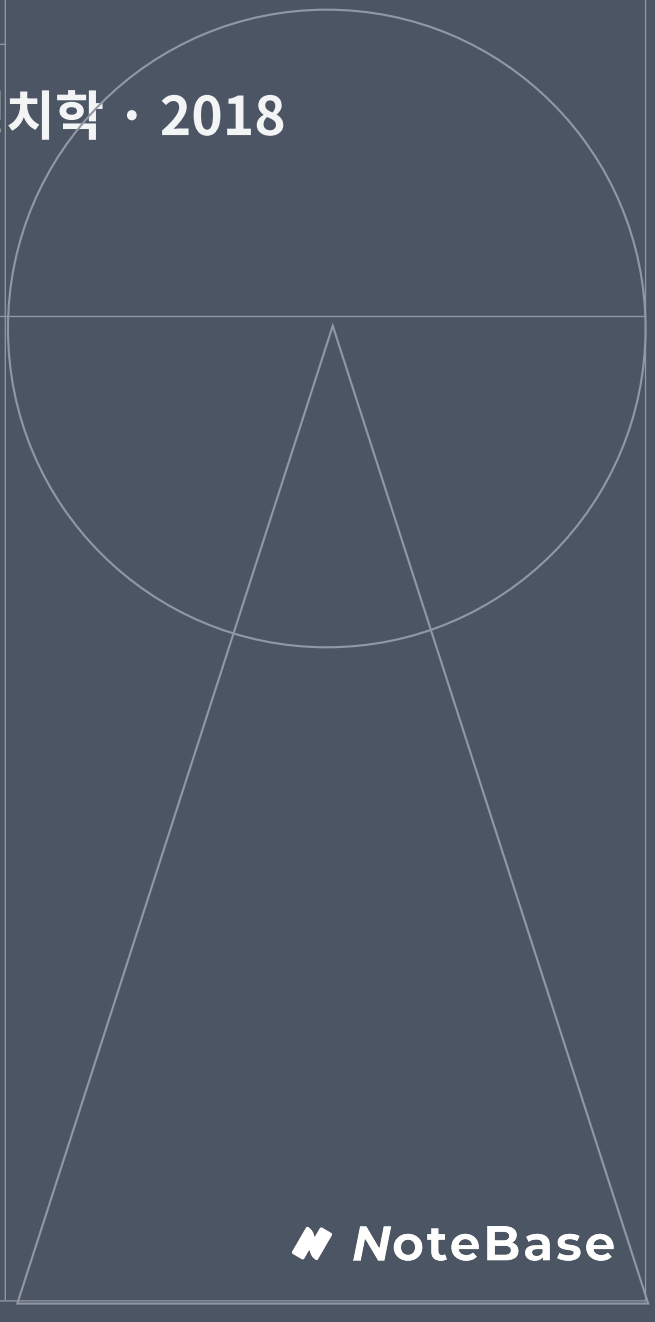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국제정치학 · 2018

문 1. 세계사적 변화를 일으킨 전쟁과 그 직후 등장한 국제체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30년 전쟁 - 베스트팔렌 체제

② 나폴레옹 전쟁 - 비스마르크 체제

③ 제1차 세계대전 - 베르사유 체제

④ 제2차 세계대전 - 얄타 체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근대 이후 주요 전쟁과 그 직후 형성된 국제질서의 대응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베스트팔렌 체제는 30년 전쟁 종결 뒤 주권국가 질서가 제도화된 체제이다. 빈 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뒤 빈 회의를 통해 복원된 보수적 세력균형 질서이다. 베르사유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뒤 베르사유 조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전후 질서이다. 얄타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말과 직후 미국과 소련 중심의 양극 질서가 굳어지는 출발점이 된 체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30년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계기로 근대적 주권국가 체제를 뜻하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성립하였으므로 연결이 맞다.

② X
나폴레옹 전쟁 직후의 국제질서는 비스마르크 체제가 아니라 빈 체제이다. 틀린 부분은 "비스마르크 체제"이다. 비스마르크 체제는 독일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의 동맹 외교로 운영된 19세기 후반의 질서이고, 나폴레옹 전쟁 직후에는 1815년 빈 회의를 바탕으로 한 빈 체제가 등장하였다.

③ O
제1차 세계대전 뒤에는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을 축으로 한 베르사유 체제가 형성되었으므로 연결이 맞다.

④ O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얄타 회담을 상징으로 하는 전후 질서가 전개되었고, 이는 미소 중심의 얄타 체제로 이해하므로 연결이 맞다.

오답 포인트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질서와 비스마르크 외교 시기를 한 덩어리로 외우면 ②에 걸리기 쉽다. 두 체제 모두 유럽 세력균형과 관련되지만, 빈 체제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직후이고 비스마르크 체제는 독일 통일 이후라는 시기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쟁과 국제체제를 연결하는 문제는 먼저 전쟁의 종료 시점을 잡고, 그 직후 체제를 만든 조약·회의·주도국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판단이 된다.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나폴레옹 전쟁은 빈 회의, 제1차 세계대전은 베르사유, 제2차 세계대전은 얄타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30년 전쟁-베스트팔렌, 나폴레옹 전쟁-빈 체제, 1차 대전-베르사유, 2차 대전-얄타의 순서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T는 조약 체결 당시의 5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하여 핵군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NPT는 모든 회원국에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③ NPT는 조약 체결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NPT는 핵무기 비보유 회원국의 평화적 원자력 사용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수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NPT가 비핵보유국의 비확산 의무, 비핵보유국의 IAEA 안전조치 수락 의무, 모든 당사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 모든 당사국의 군축 협상 의무를 어떻게 나누어 규정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핵군축 의무 = 핵군비 경쟁의 조기 중지와 핵군축을 위한 협상을 성실하게 추진할 의무이다.
IAEA 안전조치 = 평화적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는 장치이다.

핵심 구분

NPT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보유·비개발과 안전조치 수락을 요구한다. 반면 핵보유국에 대해서도 아무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6조에서 군축 협상을 성실하게 추진할 의무를 둔다. 또한 제4조는 모든 당사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권을 인정한다.

선지별 해설

1번 X: NPT 제6조는 모든 당사국이 핵군비 경쟁의 조기 중지와 핵군축에 관한 효과적 조치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조약 체결 당시 인정된 핵보유국 5개국에도 군축 관련 의무가 전혀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
틀린 표현: "핵군축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올바른 표현: "NPT는 핵보유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 핵군축 협상을 성실하게 추진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번 O: 제4조는 모든 당사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연구·생산·이용의 불가양 권리를 인정하고, 관련 장비·물자·기술 정보의 최대한 교환을 촉진하도록 한다.
3번 O: 제2조는 조약 체결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취득하지 않고, 그 제조에 관한 원조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
4번 O: 제3조는 비핵보유 당사국이 평화적 원자력 활동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IAEA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하고 그 안전조치를 수락하도록 규정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NPT를 비핵보유국 통제 조약으로만 기억하면 ①에 속기 쉽다. 이 조약은 비확산만이 아니라 평화적 이용 보장과 제6조의 군축 협상 의무까지 함께 담은 3축 구조라는 점이 함정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NPT 관련 선지는 조문 기능을 먼저 대응시키면 판단이 쉬워진다. 제1·2조는 비확산, 제3조는 IAEA 안전조치, 제4조는 평화적 이용, 제6조는 군축 협상 의무라는 틀로 읽으면 된다.

암기 포인트

NPT는 비확산, 평화적 이용, 군축의 3축 조약이며 군축 의무는 제6조에 놓여 있다.

NoteBase

문 3. 미국 대통령과 재임 시기의 주요 정책 및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트루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 및 중동지역의 공산주의 확산방지를 위한 레바논 군사 개입

② 카터: 이스라엘 - 이집트 평화조약인 캠프데이비드협정 중재 및 중국과의 국교 수립

③ 클린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및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 오슬로평화협정 체결 주도

④ 레이건: 니카라과 반군지원을 위한 이란 - 콘트라 사건 발생 및 전략방위구상(SDI) 추진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미국 대통령별 대표 외교 사건과 정책을 재임 시기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트루먼: 냉전 초기 봉쇄정책,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NATO 창설과 연결된다.
카터: 캠프데이비드협정 중재와 미중 국교 수립으로 대표된다.
클린턴: NAFTA 발효와 오슬로평화협정 시기의 중동 평화 프로세스와 연결된다.
레이건: SDI 추진과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대표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트루먼 시기에 NATO 창설은 맞지만, 레바논 군사 개입은 트루먼 시기의 사건이 아니다. 1958년 레바논 개입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의 사건이다. 틀린 표현은 '레바논 군사 개입'이며, 올바르게는 트루먼과 그리스·터키 원조를 통한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NATO 창설 등을 연결해야 한다.

② O
카터는 1978년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중재하여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기반을 만들었고, 1979년 미중 국교를 수립하였다. 선지의 두 사건 모두 카터 시기와 정확히 연결된다.

③ O
NAFTA는 1994년 클린턴 재임기에 발효되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오슬로평화협정도 클린턴 행정부 시기 중동 평화 협상과 연결된다. 선지의 연결이 타당하다.

④ O
레이건 시기에는 니카라과 반군 콘트라 지원과 관련된 이란-콘트라 사건이 발생하였고, 소련을 겨냥한 전략방위구상(SDI)도 추진되었다. 두 사건 모두 레이건 시기의 대표 사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앞부분의 'NATO 창설'이 명백히 트루먼 시기라서 뒤의 '레바논 군사 개입'까지 같은 시기로 묶어 버리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냉전 초기 중동 개입이라는 분위기만 비슷할 뿐, 레바논 개입은 아이젠하워 독트린과 연결되는 사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통령-사건 연결 문제는 한 선지 안에 사건이 두 개 이상 들어가면 각각을 따로 끊어서 본다. 한 사건만 시기가 어긋나도 전체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된다. 특히 트루먼-아이젠하워, 카터-레이건처럼 연속된 냉전 시기 대통령은 대표 사건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트루먼=NATO·봉쇄, 카터=캠프데이비드·미중수교, 클린턴=NAFTA·오슬로, 레이건=SDI·이란콘트라이다.

NoteBase

문 4.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SEAN은 1967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 외무장관회담에서 ‘ASEAN 선언’으로 결성되었다.

② 출범 이래 ASEAN 의장국은 태국이 계속 맡아 오고 있다.

③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는 ‘ASEAN + 3 + 3’인 16개국만이 참여한다.

④ 1994년 방콕에서 첫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ASEAN의 창설국, 의장국 운영 방식,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여국 확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출범 시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SEAN은 1967년 방콕선언으로 출범한 동남아 국가연합이며 창설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다.
ASEAN 의장국은 특정 국가가 고정으로 맡는 체제가 아니라 회원국이 영문 국명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마다 순환한다.
EAS는 출범 당시 ASEAN+3+3의 16개국 체제였으나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ARF는 아시아·태평양 안보대화를 위한 다자포럼으로 1994년 방콕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선지별 해설

① X: 1967년 ASEAN 창설국 5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이다. 틀린 부분은 '베트남'이다. 올바르게는 베트남이 아니라 필리핀이 들어가며, 베트남은 1995년에 가입한 후발 회원국이다.
② X: ASEAN 의장국은 태국이 계속 맡는 것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태국이 계속 맡아 오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회원국이 해마다 순환하여 의장국을 맡는다.
③ X: 선지의 'ASEAN+3+3인 16개국만이 참여한다'는 표현은 EAS 출범 초기 설명에 가깝다. 틀린 부분은 '16개국만이 참여한다'이다. 올바르게는 EAS는 출범 당시 16개국이었으나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16개국으로 고정되지 않았다.
④ O: 1994년 방콕에서 제1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개최되었다. ASEAN이 안보 분야의 대외대화를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까지 연결하면 정확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창설국과 후발 가입국을 섞어 놓은 함정이고, ②는 ASEAN 의장국을 상설직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③은 EAS의 출범 당시 16개국 구성을 현재적 일반명제처럼 바꾸어 놓은 함정이며, '계속', '만' 같은 단정 표현이 오답 신호로 작동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역기구 문항은 창설 시점의 원회원국, 후발 가입국, 의장국의 운영 방식, 참여국 확대 여부를 분리해서 본다. 선지에 '계속', '만', '항상'처럼 범위를 고정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예외나 확대 사례가 없는지 먼저 점검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ASEAN은 1967년 방콕 5국 출범, 의장국은 순환, ARF는 1994년 방콕, EAS는 16개국에서 확대라고 정리하면 된다.

NoteBase

문 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1개의 아시아 국가들이 2014년 10월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ㄴ. 창립회원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설립협정서(Articles of Agreement)를 모두 비준하였다.
ㄷ. 한국은 창립 회원으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ㄹ.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중국이 제안하였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AIIB의 설립 경과와 한국의 참여 시점, 그리고 창립회원국 절차를 정확한 연도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목표로 중국이 주도해 제안한 다자개발은행이다.
설립 경과는 2014년 10월 21개 아시아 국가의 MOU 서명, 2015년 3월 한국의 예정창립회원국 참여 결정, 2015년 5월 협정문 협상 타결, 2015년 6월 29일 협정문 서명, 2015년 12월 협정 발효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ㄴ, ㄷ의 조합인데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부분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설립협정서를 모두 비준하였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2015년 5월은 협정문 협상이 마무리된 시기이고, 서명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진행되었으며 비준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② X
ㄱ, ㄴ, ㄹ의 조합인데 역시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부분은 ㄴ을 옳은 진술로 포함한 점이다.
실제로는 창립회원국이 2015년 5월 31일까지 모두 비준한 것이 아니므로 ㄴ은 제외되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③ O
ㄱ, ㄷ, ㄹ의 조합으로 옳다.
ㄱ은 2014년 10월 24일 21개 아시아 국가가 AIIB 설립 MOU에 서명한 사실을 말하므로 맞다.
ㄷ은 한국이 2015년 3월 예정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말하므로 맞다.
ㄹ은 AIIB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위해 중국이 제안한 다자개발은행이라는 점을 말하므로 맞다.

④ X
ㄴ, ㄷ, ㄹ의 조합인데 ㄴ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부분은 "2015년 5월 31일까지 ... 모두 비준"이라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ㄷ과 ㄹ만 옳고, ㄴ 대신 들어가야 할 것은 ㄱ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흔한 함정은 협정문 협상 타결, 협정문 서명, 국내 비준, 협정 발효를 한 단계로 뭉뚱그려 기억하는 것이다.
특히 ㄴ은 2015년 5월 31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를 제시해 그때까지 모든 창립회원국 비준이 끝난 것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기구 설립 문항은 제안-양해각서-MOU, 협정문 협상, 협정문 서명, 국내 비준, 공식 발효의 순서를 먼저 분리해서 본다. 어떤 선지가 비준 완료 시점을 지나치게 앞당기면 오답 가능성이 높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AIIB는 중국 제안, 2014 MOU, 2015 한국 참여 결정, 2015 협정 서명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6. 국제정치이론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맥킨더(Halford Mackinder)는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주장
ㄴ. 웬트(Alexander Wendt)는 국가의 이익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주장
ㄷ.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간전기의 대공황을 분석하면서 영국과 미국 모두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다고 진단
ㄹ.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방어적 현실주의자로서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정치이론가를 대표 주장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형 문제이다.

핵심 정리

맥킨더: 하트랜드 지정학자이다. 유라시아 중심부를 장악한 세력이 세계 권력의 우위를 차지한다고 본다.
웬트: 구성주의자이다. 국가의 이익과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변할 수 있다고 본다.
킨들버거: 패권안정론의 대표 학자이다. 대공황의 심화를 영국의 능력 부족과 미국의 의지 부족으로 설명한다.
미어샤이머: 공격적 현실주의자이다. 강대국은 힘을 극대화하려 하며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과 ㄴ만 옳게 묶은 선택지이다. ㄱ의 맥킨더는 하트랜드를 장악한 세력이 세계 지배력을 가진다고 본 지정학자이고, ㄴ의 웬트는 국가 이익이 정체성과 상호작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본 구성주의자이다.
② X: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영국과 미국 모두 리더십을 행사할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다"이다. 올바르게는 영국은 의지는 있었으나 능력이 부족했고, 미국은 능력은 있었으나 의지가 부족했다고 본다.
③ X: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킨들버거의 핵심은 두 나라가 모두 능력 부족이었다는 점이 아니라 영국의 능력 부족과 미국의 의지 부족의 비대칭에 있다. 따라서 ㄴ은 맞지만 ㄷ이 틀려 이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ㄷ과 ㄹ이 모두 포함되어 오답이다. ㄷ은 앞서 본 것처럼 영국과 미국의 의지·능력 배치를 뒤바꾸었고, ㄹ의 틀린 표현은 "방어적 현실주의자"이다. 올바르게는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자이며, 중국 봉쇄론에 가까운 견해를 제시한다.

오답 포인트

킨들버거는 영국과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서로 바꿔 넣기 쉽고, 미어샤이머는 중국 견제 주장만 기억한 채 공격적 현실주의를 방어적 현실주의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출제자는 바로 이 두 지점을 함정으로 걸어 두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 이름이 보이면 먼저 대표 이론을 한 단어로 붙여 본다. 맥킨더는 하트랜드, 웬트는 구성주의, 킨들버거는 패권안정론, 미어샤이머는 공격적 현실주의로 잡아 두면 선지의 잘못 연결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맥킨더=하트랜드, 웬트=정체성·상호작용, 킨들버거=영국 의지·미국 능력의 엇갈림, 미어샤이머=공격적 현실주의이다.

NoteBase

문 7. 국제인권기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인권 보장을 위한 주요 기관 중 하나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있다.

②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는 인권 침해 상황이 심각한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③ 지역 인권체제의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인권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

④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는 국가별, 특정 주제별로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 의견을 낸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소속과 특별절차,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의 대상 범위, 아시아 지역 인권체제의 부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산하의 인권기구로서 국가별·주제별 특별절차를 통해 인권 상황을 점검한다. / 결정 차이축: 소속 기관과 기능 / 키워드: 총회 산하, 특별절차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심의하는 제도이다. / 결정 차이축: 대상 범위 / 키워드: 전 회원국, 정기 심의

지역 인권재판소: 유럽·미주·아프리카에는 제도화된 재판소가 있으나 아시아에는 통합된 역내 인권재판소가 없다. / 결정 차이축: 지역체제 존재 여부 / 키워드: 아시아 부재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유엔 인권이사회가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기구라는 점은 맞지만, 틀린 부분은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 산하 보조기관이며,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였던 것은 과거의 유엔 인권위원회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이다. UPR은 특정 문제국만 선별하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을 같은 틀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보편적 심의 제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아시아 인권재판소가 운영되고 있다"이다. 아시아에는 유럽인권재판소나 미주인권재판소처럼 제도화된 지역 인권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O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국가별·주제별 특별절차가 있고, 그 수단으로 특별보고관·독립전문가·실무그룹 등이 활용된다. 따라서 국가별 또는 특정 주제별로 실무그룹을 두어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 의견을 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를 혼동하면 ①에 속기 쉽다. UPR의 "보편적"을 놓치면 특정 인권침해국 감시제도로 오해하여 ②를 고르기 쉽고, 다른 지역의 인권재판소 존재를 아시아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③에 끌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인권기구 문제는 먼저 소속 기관, 심의 대상의 범위, 지역 인권체제의 존재 여부를 나누어 본다.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전 회원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절차"라는 표현이 보이면 국가별·주제별 감시 장치인지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인권이사회는 총회 산하, UPR은 전 회원국 심의, 아시아에는 역내 인권재판소가 없다.

NoteBase

문 8. 유럽 통합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참여하였다.

② 단일유럽의정서(SEA)를 통해 회원국들은 1992년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방식을 만장일치제로 변경하였다.

③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만들기 위한 경제통화동맹(EMU) 설립에 합의하였다.

④ 유럽연합은 2003년 유럽헌법조약 초안에 서명하였지만 이후에 일부 회원국에서 비준이 부결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ECSC, 단일유럽의정서,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헌법조약 추진 등 유럽 통합의 단계별 핵심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ECSC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가 석탄과 철강을 공동 관리한 최초의 초국가적 공동체이다.
단일유럽의정서(SEA)는 1992년 단일시장 완성을 목표로 삼고, 그 추진을 위해 각료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다수결 적용 범위를 확대한 조약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틀과 경제통화동맹(EMU) 추진을 제도화한 조약이다.
유럽헌법조약은 통합 심화를 위한 헌법화 시도였으나 일부 회원국의 비준 실패로 발효되지 못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ECSC의 창설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6개국이므로 선지 내용이 맞다.
② X: 틀린 부분은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제로 변경"하였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단일유럽의정서가 1992년 단일시장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각료이사회에서 특정 분야의 가중다수결 적용을 확대하여 만장일치의 범위를 줄였다.
③ O: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통화동맹(EMU) 설립에 합의하여 단일 화폐인 유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O: 유럽헌법조약은 2003년 초안 작성 이후 추진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에서 비준이 좌절되어 발효되지 못하였다. 선지는 이 통합 심화 시도와 비준 실패의 흐름을 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단일유럽의정서는 통합 심화를 위한 조약이므로 만장일치가 더 강화되었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함정은 정반대이다. 단일시장 완성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연을 줄여야 했기 때문에 다수결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럽 통합사 문제는 조약 이름만 외우지 말고 각 조약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연결해서 판단하면 된다. ECSC는 6개국 출발, SEA는 1992년 단일시장과 다수결 확대, 마스트리히트는 EU·EMU, 유럽헌법조약은 비준 실패로 정리하면 선지 판별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SEA는 단일시장+다수결 확대, 마스트리히트는 EU+EMU, 유럽헌법조약은 비준 실패이다.

NoteBase

문 9. 국제협상의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에서 '윈셋(win-se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셋의 크기는 국내 여러 집단의 이해와 국내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② 정책결정자가 국내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윈셋이 커져서 국제적 협상력은 높아진다.

③ 윈셋이 클수록 국제협상에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당사국들의 윈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퍼트넘의 양면게임이론에서 원셋의 의미와 원셋의 크기가 합의 가능성 및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셋은 국내 비준이나 승인까지 통과할 수 있는 국제합의안의 집합이다.
원셋이 크면 국내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 범위가 넓어져 국제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 국내 제약이 약하다고 해서 협상력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며, 좁은 원셋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이상 양보하기 어렵다는 협상지렛대로 작동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원셋의 크기는 국내 여러 집단의 선호와 압력, 비준 절차, 정당구조 같은 국내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국내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원셋이 커져서 국제적 협상력은 높아진다"이다.
정책결정자가 국내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면 원셋이 커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상대국은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협상력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국내 제약이 약하면 원셋이 커져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협상력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이다.

③ O
원셋이 클수록 국내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 많아져 상대국 원셋과 겹칠 가능성이 커지므로 국제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④ O
국제합의가 성립하려면 각국이 국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안이 공통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협상당사국들의 원셋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원셋의 크기와 합의 가능성, 협상력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연결하면 ②에 걸리게 된다. 퍼트넘은 큰 원셋이 타결에는 유리하다고 보지만, 국내 제약이 있는 좁은 원셋은 상대에게 양보 한계를 제시하는 협상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원셋 관련 선지는 먼저 합의 가능성과 협상력을 분리해서 본다. 큰 원셋은 대체로 합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협상력은 국내 제약이 협상대표의 손을 얼마나 묶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

암기 포인트

큰 원셋은 타결에 유리하고, 좁은 원셋은 협상지렛대가 될 수 있다.

NoteBase

문 10. 1930년대 독일의 외교정책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자르(Saar) 지역의 독일 귀속 결정 국민투표
ㄴ. 독일-오스트리아의 관세동맹 조약
ㄷ.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뮌헨협정
ㄹ.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ㄷ → ㄹ → ㄱ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ㄷ → ㄴ → ㄹ → 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1930년대 독일 외교정책 관련 사건을 발생 시점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독일-오스트리아 관세동맹 조약 - 1931년에 추진된 경제통합 시도이다.
2. ㄹ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 1933년에 히틀러 정권이 집단안보 체제에서 이탈한 사건이다.
3. ㄱ 자르 지역의 독일 귀속 결정 국민투표 - 1935년에 자르 주민투표로 독일 복귀가 결정되었다.
4. ㄷ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뮌헨협정 - 1938년에 체결된 유화정책의 대표적 사건이다.

왜 이 순서인가: 1931년의 관세동맹 시도가 가장 이르고, 국제연맹 탈퇴가 그 뒤인 1933년, 자르 국민투표가 1935년, 뮌헨협정이 1938년이므로 ㄴ→ㄹ→ㄱ→ㄷ의 연표가 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렸다. 자르 국민투표는 1935년이고 독일-오스트리아 관세동맹 조약은 1931년이다. 틀린 표현은 'ㄱ→ㄴ'의 선후관계이며, 올바르게는 'ㄴ→ㄹ→ㄱ→ㄷ'이다.

② X: ㄷ을 두 번째에 둔 것이 틀렸다. 뮌헨협정은 1938년으로 국제연맹 탈퇴(1933년), 자르 국민투표(1935년)보다 늦다. 틀린 표현은 'ㄴ→ㄷ→ㄹ→ㄱ'의 중간 배열이며, 올바르게는 'ㄴ→ㄹ→ㄱ→ㄷ'이다.

③ O: ㄴ(1931) → ㄹ(1933) → ㄱ(1935) → ㄷ(1938)의 연표가 정확하다. 경제통합 시도, 국제연맹 탈퇴, 자르 복귀, 뮌헨협정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④ X: ㄷ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렸다. 뮌헨협정은 네 사건 중 가장 늦은 1938년 사건이다. 틀린 표현은 'ㄷ→ㄴ'의 선후관계이며, 올바르게는 'ㄴ→ㄹ→ㄱ→ㄷ'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르 국민투표와 뮌헨협정은 모두 히틀러 시기의 영토 재편 사건이라 시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자르 국민투표는 1935년이고 뮌헨협정은 1938년이다. 국제연맹 탈퇴를 1930년대 후반 사건으로 늦춰 잡아도 배열이 흔들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배열형은 각 사건의 정확한 연도를 먼저 붙인 뒤 가장 이른 것부터 나열하면 된다. 이 문항은 1931, 1933, 1935, 1938로 연도를 붙이면 정답이 바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독일 외교 연표는 관세동맹 1931 → 연맹탈퇴 1933 → 자르복귀 1935 → 뮌헨협정 1938이다.

NoteBase

문 11. 1945년 포츠담 선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였고 2차대전 후 일본의 영토 범위를 명시하였다.

② 한국의 독립 문제가 최초로 거론되었다.

③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였다.

④ 미국, 영국, 중국 3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역할을 구분하고, 포츠담 선언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카이로 선언: 1943년 연합국이 전후 처리 원칙을 밝히면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장래 목표로 처음 명시한 선언이다.
포츠담 선언: 1945년 미국·영국·중국이 일본에 제시한 항복 조건으로, 카이로 선언의 이행과 일본 주권의 범위를 확인한 선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항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일본의 주권이 혼슈·홋카이도·규슈·시코쿠 및 연합국이 정하는 부속 도서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카이로 선언의 이행 촉구와 전후 일본 영토 범위의 명시는 맞는 설명이다.
2번 X: 틀린 부분은 "최초로"이다.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이미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만든다"는 취지로 제기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이를 처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이다.
3번 O: 포츠담 선언은 일본 군국주의의 제거와 함께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는 선언 내용에 해당한다.
4번 O: 포츠담 선언은 1945년 미국·영국·중국 3국이 발표하였다. 소련은 발표 주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3국에 의해 발표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모두 대일 전후 처리와 동아시아 질서를 다루기 때문에 한국 독립 언급의 최초 시점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2번의 "최초로"라는 시간 표현을 놓치면 틀리게 설계되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후 국제선언 문제가 나오면 먼저 선언의 연도와 기능을 구분한다. 카이로 선언은 전후 원칙 제시와 한국 독립의 최초 명시, 포츠담 선언은 일본에 대한 항복 조건 제시와 카이로 선언 이행 확인으로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카이로는 한국 독립을 처음 제시했고, 포츠담은 일본 항복 조건과 카이로 이행을 재확인했다.

NoteBase

문 12.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직행위자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은 조직과정의 결과물이다.

② 조직은 편협성과 타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③ 조직은 표준실행절차(SOPs)를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적용하므로 대안이 제한될 수 있다.

④ 조직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성을 추구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앨리슨의 조직행위자 모델이 외교정책 결정을 국가의 단일한 합리적 계산이 아니라 조직의 표준절차와 기존 루틴의 산물로 본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직행위자 모델: 국가는 하나의 일사불란한 행위자가 아니라 여러 조직이 정해진 절차와 관행에 따라 움직인 결과로 정책이 나온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조직과정, 표준실행절차, 제한된 적응성이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국가는 단일 행위자로서 국가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대안을 비교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단일 행위자, 대안 비교, 효용 극대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가의 외교정책결정이 조직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은 조직행위자 모델의 핵심이다. 이 모델은 정책을 조직의 일상적 절차와 산출의 누적으로 본다.

② O
조직은 편협성과 타성을 가지므로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조직행위자 모델은 이러한 관성 때문에 기존 방식이 반복된다고 본다.

③ O
조직은 표준실행절차를 적용하므로 가능한 대응 방식과 대안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미 마련된 절차가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히는 점이 이 모델의 중요한 특징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국가를 단일한 합리적 행위자로 보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설명이다. 조직행위자 모델에서는 국가이익 극대화보다 조직의 표준절차와 기존 루틴에 따라 정책이 산출된다고 본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합리성',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익숙한 표현 때문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표현이 조직행위자 모델이 아니라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표지이다. 이 문항은 조직의 SOP를 묻는지, 단일 국가의 최적 선택을 묻는지를 구분하면 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표준실행절차, 관성, 조직과정, 제한된 대안이 나오면 조직행위자 모델로 판단한다. 반대로 국가이익 극대화, 단일 행위자, 최적 대안 선택이 나오면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직행위자 모델은 SOP의 산물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최적화의 산물이다.

NoteBase

문 13. 국제정치경제를 바라보는 중상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상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② 자유주의는 국가 간 무역의 증가가 상호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③ 중상주의는 절대적 이익을 중시하고 보호무역을 추구한다.

④ 마르크스주의는 부등가교환으로 세계경제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정치경제의 대표 이론인 중상주의,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가 국가, 무역, 이익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상주의는 국제경제를 국가 간 힘의 경쟁으로 보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국부 축적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국가, 상대적 이익, 보호무역이다.
자유주의는 국제경제를 상호이익을 늘릴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보고 자유무역과 절대적 이익을 중시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상호의존, 절대적 이익, 자유무역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착취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이다. 키워드는 중심-주변, 종속, 부등가교환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중상주의는 시장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익과 권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맞다.

② O
자유주의는 무역이 분업과 교환을 통해 참여국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가 간 무역의 증가가 상호이익이 된다는 설명은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에 해당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절대적 이익을 중시하고'이다. 중상주의는 국제경제를 경쟁적 관계로 보므로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을 더 중시한다. 보호무역을 추구한다는 뒤부분은 중상주의 설명에 맞지만, 앞의 절대적 이익이라는 표현이 자유주의의 특징과 뒤바뀌어 있으므로 전체 선지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중상주의는 상대적 이익을 중시하고 보호무역을 추구한다'가 된다.

④ O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된다고 본다. 부등가교환이 세계경제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한다는 설명은 맞다.

오답 포인트

중상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무역이론으로만 외우면 ③처럼 '보호무역'이라는 맞는 표현 때문에 전체 선지를 맞다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보호무역 여부보다 앞부분의 '절대적 이익'과 '상대적 이익'을 바꿔 놓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정치경제 이론 비교 문제는 먼저 국가를 보는 시각과 이익 개념을 나눠서 판단한다. 국가 경쟁과 상대적 이익이면 중상주의, 상호이익과 절대적 이익이면 자유주의, 구조적 착취와 불평등이면 마르크스주의로 정리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중상주의는 국가와 상대적 이익, 자유주의는 자유무역과 절대적 이익, 마르크스주의는 구조적 불평등과 부등가교환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4. 유럽연합(EU)의 기구 중 정부 간 기구는?

①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②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③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④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EU의 주요 기관을 정부 간 기구와 초국가적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유럽이사회는 회원국 정상급이 모여 EU의 큰 정치 방향을 정하는 정부 간 기구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 대표기구가 아니라 EU 전체의 공동이익을 대표하는 초국가적 집행기관이다.
유럽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기관이고, 유럽사법재판소는 EU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유럽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이 참여해 EU의 주요 정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관이므로 정부 간 성격이 가장 강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정부 간 기구'라는 판단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합의체가 아니라 EU 공동이익을 대표하며 법안 제안과 정책 집행을 맡는 초국가적 집행기관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정부 간 기구'라는 판단이다. 유럽의회는 회원국 정부가 아니라 EU 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는 대표기관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정부 간 기구'라는 판단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 정부 간 협의기구가 아니라 EU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회원국이 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위원회까지 정부 간 기구처럼 오인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은 기관의 명칭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대표하는지이다. 특히 유럽이사회와 다른 EU 기관을 구성 원리 없이 묶어 외우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U 기관 문제는 먼저 구성 주체와 대표 대상을 본다. 회원국 정상이나 정부 대표가 모여 정치적 방향을 정하면 정부 간 기구이고, EU 전체 이익이나 시민 대표, 사법 기능을 맡으면 초국가적 기관이나 대표기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유럽이사회는 정상회의, 집행위원회는 초국가 집행, 유럽의회는 시민 대표, 사법재판소는 EU 법 해석 기관이다.

NoteBase

문 15. 스나이더(Jack Snyder)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대외팽창은 국내정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② 강대국은 국내체제가 과두체제인 경우에 대외팽창을 추구할 수 있다.

③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안보를 항상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④ 민주주의로 이행 중이거나 공고화된 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잭 스나이더의 국내정치 중심 대외팽창론과 민주화 이행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스나이더는 국가의 대외팽창을 국제구조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국내정치 연합, 엘리트 이해관계, 팽창 신화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고 본다.
특히 과두적 연합이 권력을 장악한 체제에서는 대외팽창이 국내정치적으로 동원되기 쉽다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민주화 이행기가 자동으로 평화롭다고 보지 않고, 이행기 엘리트가 민족주의를 동원하면 오히려 대외갈등과 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스나이더는 대외팽창의 원인을 국제적 무정부 상태만이 아니라 국내정치 변화와 연합구조에서 찾는다. 따라서 국가의 대외팽창이 국내정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의 이론 방향과 맞다.

② O
그는 특히 과두적 국내체제에서 협소한 엘리트 연합이 팽창정책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밀어붙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두체제와 대외팽창의 연결은 스나이더 이론의 핵심이다.

③ O
스나이더는 무정부 상태 자체가 언제나 동일한 수준의 안보위협을 자동으로 낳는다고 보지 않는다.
국제구조만으로는 팽창을 설명할 수 없고, 국내정치적 해석과 동원이 결합해야 공격적 팽창이 나타난다고 본다.

④ X
틀린 부분은 "민주주의로 이행 중이거나"이다. 민주평화론은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 부재를 말하지만, 스나이더는 민주화 이행국이 오히려 민족주의 동원과 엘리트 경쟁 때문에 전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평화는 민주평화론의 주장이고, 민주화 이행기는 스나이더에게 오히려 불안정한 시기이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민주평화론의 문장을 스나이더에게 섞어 놓은 선지라는 점이 함정이다. "공고화된 민주주의"만 보면 익숙한 명제로 보이지만, "민주주의로 이행 중이거나"가 붙는 순간 스나이더의 입장과 정반대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나이더가 나오면 먼저 "국내정치와 엘리트 연합이 팽창을 만든다"를 떠올리면 된다. 이어서 민주화 이행기는 평화의 자동 보장이 아니라 민족주의 동원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연결하면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스나이더 = 국내정치가 팽창을 만들고, 민주화 이행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NoteBase

문 16. 난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 발생의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가난, 자연재해 등도 협약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② 난민협약 체결국이 아닌 곳에 상주 시 난민협약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난민과 동일한 상주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③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에게 적용되고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난민의 지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난민의 인정이나 수용은 발생국과 수용국 간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협약난민의 정의, UNHCR의 역할,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난민지위의 개인성과 수용정책의 정치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협약난민은 박해를 피해 국외로 나온 사람이라는 점, 비체약국에서의 UNHCR 인정이 곧바로 협약당사국과 동일한 권리보장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 강제송환금지는 난민신청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협약난민 =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상 박해 우려 때문에 국외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강제송환금지 =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곳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난민보호의 핵심 원칙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협약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다만 가난이나 자연재해 자체만으로는 협약난민 정의에 바로 포함되지 않는다.
UNHCR의 난민지위인정은 비체약국이나 난민심사체계가 미비한 곳에서 국제적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이지만, 상주국이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부담하는 조약상 권리보장을 자동으로 동일하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강제송환금지는 인정된 난민만이 아니라 난민인지 심사 중인 신청자에게도 적용된다.
난민지위는 개인별 사정으로 판단하지만, 실제 인정과 수용정책은 국가의 외교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협약난민의 핵심은 박해 우려이지 단순한 빈곤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다.
- 틀린 표현: "가난, 자연재해 등도 협약난민의 정의에 포함되었다"
- 올바른 표현: 가난이나 자연재해만으로는 협약난민이 아니며, 그 상황이 박해나 무력충돌과 결합해 협약상 박해 사유로 연결될 때에만 난민성 검토가 가능하다.

② X
- 비체약국에서는 UNHCR이 난민지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주국에서 협약체약국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이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 틀린 표현: "UNHCR에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난민과 동일한 상주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 올바른 표현: UNHCR 인정은 국제적 보호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실제 체류권·취업·복지 등은 상주국의 법제와 협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③ X
-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으로 최종 인정된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난민 여부를 심사받는 신청자도 위험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도록 보호한다.
- 틀린 표현: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올바른 표현: 난민신청자는 심사 중에도 박해 위험 지역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되므로 강제송환금지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④ O
- 난민지위 판단의 단위는 개인이다. 다만 국가가 특정 난민집단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정·수용하는지는 외교관계, 안보인식, 부담분담 의지 같은 국가 간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적 난민성 판단과 국가의 수용정책을 분리해서 보면 옳은 선지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①은 난민과 일반적 강제이주민을 섞어 놓은 함정이다. ②는 UNHCR의 인정과 국가의 조약상 권리보장을 동일시한 함정이다. ③은 강제송환금지를 인정난민에게만 한정하는 표현으로, 난민신청자 보호 범위를 축소해 헷갈리게 만든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난민 문제가 나오면 먼저 협약난민의 요건이 박해인지, 단순 빈곤·재난인지부터 가른다. 다음으로 UNHCR의 보호 역할과 국가가 실제로 보장하는 조약상 권리를 분리한다. 마지막으로 강제송환금지는 인정 전 신청단계에도 미친다는 점을 기준으로 선지를 정리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협약난민은 박해, 강제송환금지는 신청단계부터, 수용정책은 국가정치의 영향을 받는다.

NoteBase

문 17. 기축통화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축통화국이 되면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증진되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제무역 및 금융거래가 자국의 통화로 이루어져 무역적자로부터 자유롭다.

③ 기축통화국 금융기관들의 해외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④ 기축통화국은 자국 화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축통화국이 가지는 편익과 부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축통화국은 국제결제와 외환보유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이다. 편익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사용 확대, 금융 영향력 증대, 거래비용 절감이다. 부담은 통화 신뢰 유지를 위한 대외유동성 공급, 대외적자 부담, 통화가치 안정 비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축통화국이 되면 자국 통화가 국제결제와 준비자산으로 널리 쓰이므로 국제사회에서 위상과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무역적자로부터 자유롭다"이다.
실제로는 국제무역 및 금융거래를 자국 통화로 처리하여 환전비용과 환율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무역적자 자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기도 한다.

③ O
기축통화국의 통화와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표준처럼 쓰이면 그 나라 금융기관의 해외영업과 자금중개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④ O
기축통화국은 자국 화폐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므로 물가안정, 금융시장 안정, 대외지급능력 유지에 지속적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자국 통화 결제 가능"이라는 편익을 "무역적자 면제"로 과장한 선지이다. 기축통화국의 특권과 적자 부담을 함께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축통화국 관련 선지는 먼저 편익과 부담을 나누어 본다. 국제결제 편의, 영향력 확대, 금융활동 증가는 편익이고, 대외적자와 통화신뢰 유지비용은 부담이다. 따라서 "적자에서 자유롭다"처럼 부담을 지워 버리는 표현은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축통화는 국제적 특권을 주지만 무역적자 면제권을 주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8. 신고전적 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체제에서 이익의 배분에 초점을 둔 이익균형론(balance of interests)을 주장하였다.

② 국내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국가를 현상유지국가와 현상타파국가로 구분하였다.

④ 동맹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전략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고전적 현실주의가 구조현실주의와 달리 국내 변수와 국가의 이익 성향을 함께 보며, 세력균형론이 아니라 이익균형론으로 동맹과 대외행동을 설명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힘 분포가 외교정책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 효과는 국내정치·국가역량·지도자 인식 같은 국내적 매개 변수를 거쳐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이다.
대표적 논의인 슐웰러의 이익균형론은 국가가 단순히 강한 힘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이익과 위협 인식에 따라 연합과 대외전략을 선택한다고 본다.
이 맥락에서 국가는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현상유지국가와 질서 변화를 추구하는 현상타파국가로 나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대표 학자인 슐웰러는 세력의 분포만으로 국가행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들이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지에 주목하는 이익균형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익의 배분과 이익 성향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② O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만으로 외교정책이 자동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국내정치, 국가의 동원능력, 지도자의 인식 같은 국내적 요인이 체제 압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영하는지를 강조하므로 옳다.

③ O
슐웰러는 국가를 기존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유지국가와 이를 바꾸려는 현상타파국가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국가가 왜 같은 세력구조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치이므로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전략에 따라"이다.
신고전적 현실주의, 특히 이익균형론은 동맹이 단순한 세력균형 논리만으로 형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는 국가의 이해관계, 수정주의 여부, 위협 인식이 함께 작용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동맹은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과 위협 인식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가 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현실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자동으로 세력균형론을 떠올리게 만드는 함정이다. 그러나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구조현실주의의 세력 중심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고, 국내 변수와 이익 성향을 끌어들여 왜 어떤 국가는 균형을 택하고 어떤 국가는 편승하거나 질서 변경을 시도하는지를 설명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현실주의 계열 문제에서 선지에 국내정치, 지도자 인식, 국가역량, 현상유지국가·현상타파국가, 이익균형론이 보이면 신고전적 현실주의 쪽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동맹을 오로지 세력 분포만으로 설명하면 구조현실주의 쪽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신고전적 현실주의는 힘만이 아니라 국내 변수와 이익을 함께 보고, 슐웰러는 세력균형이 아니라 이익균형을 강조한다.

NoteBase

문 19. 해외원조를 위한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DAC 회원국은 GNP의 0.7%를 기부하기로 목표를 세웠고 모두 이를 달성하였다.

② DAC 회원국의 정부 원조 가운데 $\frac{3}{4}$ 정도가 양자 간 원조 형태로 수혜국으로 제공된다.

③ 미국은 GNP 기준 해외원조 비율 순위가 DAC 회원국 중 상위그룹에 속한다.

④ 한국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DAC 회원국이 되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AC의 기본 성격과 원조 방식의 구분, 그리고 원조 총액과 국민소득 대비 비율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DAC는 OECD 산하의 개발원조 정책 협의체로서 회원국의 원조 규모와 방식, 효과성을 함께 점검하는 기구이다.
양자 간 원조는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에 직접 제공하는 원조이고, 다자 간 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는 원조이다.
ODA의 0.7% 기준은 국민소득 대비 원조 목표치이지 모든 회원국이 이미 달성했다는 뜻은 아니다.
원조 총액이 크다는 것과 GNP 또는 GNI 대비 원조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모두 이를 달성하였다"이다.
DAC 회원국들은 GNP 대비 0.7% 원조 목표를 오래 공유해 왔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한 국가는 일부에 그친다.
올바르게는 "DAC 회원국은 GNP의 0.7% 원조 목표를 제시했지만 모든 회원국이 이를 달성한 것은 아니다."이다.

② O
DAC 회원국의 정부 원조는 대체로 양자 간 원조의 비중이 더 크며, 전체의 약 4분의 3 안팎이 양자 간 원조 형태로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DAC 원조 구조를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한 선지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상위그룹에 속한다"이다.
미국은 원조 총액 자체는 매우 크지만 GNP 기준 해외원조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니므로 DAC 회원국 중 상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미국은 원조 총액은 크지만 GNP 기준 해외원조 비율 순위는 높지 않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DAC 회원국이 되었다"이다.
한국은 2010년에 이미 DAC 회원국이 되었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는 가입 이후 한국의 개발협력 위상을 보여 준 행사였다.
올바르게는 "한국은 2010년에 DAC 회원국이 되었고, 2011년 부산 총회는 그 이후 열린 국제개발협력 행사였다."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목표와 달성, 총액과 비율, 가입 시점과 국제행사를 서로 섞어 놓았다는 점이다.
①은 0.7% 목표 자체는 익숙하지만 "모두 달성"이라는 과장 표현이 틀렸고, ③은 미국의 절대 원조액이 크다는 사실을 비율 순위와 혼동하면 틀리기 쉽다.
④는 부산 총회를 기억하더라도 한국의 DAC 가입 시점이 2010년이라는 선후관계를 놓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DAC 관련 선지는 먼저 원조의 전달 방식이 양자인지 다자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총액과 국민소득 대비 비율을 분리해서 본다.
또한 "목표를 세웠다"와 "이미 모두 달성했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므로 달성 여부를 따로 판단한다.
한국 관련 선지는 2010년 DAC 가입, 2011년 부산 총회라는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DAC 0.7은 목표, 원조는 대체로 양자 중심, 미국은 총액과 비율을 구분, 한국 DAC 가입은 2010년이다.

NoteBase

문 20. 인권 관련 유엔 협약을 체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ㄷ.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ㄱ → ㄹ → 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요 유엔 인권협약이 채택된 선후 순서를 정확한 연도로 구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 1965년에 채택된 가장 이른 협약이다.
2. ㄷ.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1979년에 채택되었다.
3. 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89년에 채택되었다.
4. ㄹ.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 2006년에 채택된 가장 늦은 협약이다.

왜 이 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여성차별철폐협약보다 먼저이고, 아동권리협약은 그보다 뒤이며,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협약이어서 가장 뒤에 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을 맨 앞에 둔 점이 틀리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89년 채택이므로 1965년의 인종차별철폐협약과 1979년의 여성차별철폐협약보다 늦다.
틀린 표현: ㄱ → ㄴ → ㄷ → ㄹ
올바르게는: ㄴ → ㄷ → ㄱ → ㄹ이다.

② X
ㄴ 다음에 바로 ㄱ을 둔 점이 틀리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197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1989년이므로 ㄷ이 ㄱ보다 먼저 온다.
틀린 표현: ㄴ → ㄱ → ㄷ → ㄹ
올바르게는: ㄴ → ㄷ → ㄱ → ㄹ이다.

③ O
인종차별철폐협약(1965) → 여성차별철폐협약(1979) → 아동권리협약(1989) → 장애인권리협약(2006)의 순서이므로 맞다.

④ X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맨 앞에 두고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맨 뒤에 둔 점이 틀리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네 협약 중 가장 이르다.
틀린 표현: ㄷ → ㄱ → ㄹ → ㄴ
올바르게는: ㄴ → ㄷ → ㄱ → ㄹ이다.

오답 포인트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선후를 바꾸거나, 최근 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은 기억하면서 가장 오래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연도를 놓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협약 명칭의 친숙함이 아니라 채택 연도의 선후 비교에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권협약 순서 문제는 각 협약의 대표 연도부터 잡으면 된다. 1965년 인종차별철폐, 1979년 여성차별철폐, 1989년 아동권리, 2006년 장애인권리처럼 가장 이른 협약과 가장 늦은 협약을 먼저 고정하면 가운데 순서가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인종 65 → 여성 79 → 아동 89 → 장애 06의 흐름으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